

기 고

191 개 유엔회원국과 수교 완결, 외교관계 대기록 세우다

장지향

수석연구위원

2025-04-30

“한국은 지난해 2 월 북한과만 수교해 오던 '쿠바'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데 이어, 이번 '시리아'와의 수교까지 성사시키며 '모든 유엔 회원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대기록을 세웠다.”

2025 년 4 월 10 일, 대한민국은 193 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마지막 미수교국이던 시리아와 마침내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극비리에 수도 다마스쿠스를 찾아 이뤄낸 이번 수교는 한 편의 외교 첩보극을 방불케 했고 우리 외교 지형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극적인 순간이었다.

조 장관은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듯, 어렵게 마련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리아를 방문했다"며 양국 수교를 '끝내기 홈런'에 비유했다.

현재 시리아 과도정부를 이끄는 이슬람주의 반군 하야트 타흐리르 알샤(HTS, 시리아해방기구)이 지난해 12 월 초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면서 가능해진 놀랍고도 반가운 변화다.

HTS는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 이후 알아사드 정권에 맞서 싸워왔다. 2024년 11월 말, 전열을 재정비한 HTS는 다마스쿠스에서 300km 떨어진 거점을 출발해 열흘 만에 수도를 장악했다. 정부군은 이렇다 할 저항조차 못 한 채 투항했고 '시리아의 도살자'로 불리던 알아사드는 후원국인 러시아로 도주했다. 1970년 쿠데타로 집권한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 이래 54년간 이어진 부자 세습 독재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한국은 지난해 2월 북한과만 수교해 오던 쿠바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데 이어, 이번 시리아와의 수교까지 성사시키며 모든 유엔 회원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대기록을 세웠다. 북한은 주요 해외 공작 거점을 또 잃게 되었고,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실제로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하던 당시 현지 북한대사관은 서둘러 철수했다.

시리아 세습 독재의 갑작스러운 몰락은 독재체제 특유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독재체제는 겉으로는 평온한 정치 상황을 유지하는 듯 보이다가도, 별다른 전조 없이 극적으로 무너지는 속성을 지닌다. 억압과 통제로 내부 여론을 차단한 결과, 체제는 몰락의 징후조차 감지하지 못했고, 부패와 불신 속에 한순간에 무너졌다. 독재의 가장 큰 아이러니다.

중동 정세의 급변도 시리아 몰락에 결정적이었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했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지상전을 거쳐 2024년 10월 역내 '새로운 질서' 작전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란이 후원한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사실상 와해됐고, 이란 혁명수비대도 큰 타격을 입었다. HTS가 다마스쿠스로 진격할 당시 시리아의 오랜 뒷배 역할을 해온 이란은 정부군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었고, 우크라이나전에 발이 묶인 러시아 역시 무기력했다.

북한과 닮아 있는 시리아 정권의 몰락은 북한에 실존적 불안감을 안겨줄 것이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알아사드 정권은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과 혈맹 관계를 이어왔고 시리아처럼 북한도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에 생존을 의지하고 있다. 러시아와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까지 약속한 북한으로서는, 최근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밀월 기류가 어디까지 진전될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2025년 1월 HTS 수장 아흐메드 알샤라는 과도정부를 구성해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전쟁으로 붕괴된 경제와 국가 제도를 복구하고 헌법 채택과 선거 시행까지 최대 4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전 이후 경제가 85% 이상 위축되고 인구의 90%가 빈곤선 이하에 놓인 절망적 상황이 최대 과제로 지적된다.

시리아는 한국의 경제 성장 비결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발전 모델을 배우기 위한 실무 대표단 파견 의사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개발 경험 공유, 인도적 지원, 경제 재건 협력을 제안했다.

실제로 한국은 많은 중동 국가에서 아시아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시장경제를 이룬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중동 이슬람 국가들은 전통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상 사회주의 체제나 서구식 자유주의 모델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우리의 경험이 새로운 시리아를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과 확신을 줄 수 있길 바란다.

* 본 글은 4월 30일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